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3월 8일은 107번째 맞는 '세계 여성의 날'

01 주요 내용

- 3월 8일은 세계여성의 날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유엔(UN)에서 정한 기념일로 107번째를 맞는 올해 테마는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Feminism Perfects Democracy)*"
-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되었고, 1911년 유럽에서 첫 행사가 개최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
- 유엔에서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 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 로 공식화함으로써 기념하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1985년부터 관련 행사를 해오고 있음
- 19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 30년 동안 전국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여전히 최하위로 경제참여와 교육평등 분야가 가장 낮음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6 세계 성 격차 보고서(The Global Gap Report 2016)에 의하면, 남녀의 경제적 격차는 더 벌어져 이를 좁히려면 무려 170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
- 성평등이 잘 실현된 나라는 아이슬란드(0.874) 노르웨이(0.845) 순이며, 아시아 국가 중에는 필리핀 7위로 가장 높고,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각각 87, 88위로 우리나라보다 높음
-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는 0.649점으로 144개국 중에서 116위로 하위 수준이며, 분야별로는 ①경제참여와 교육 123위, ②교육성취도 102위, ③건강과 생존 76위, ④정치권한 부여 92위
- 특히, 비슷한 일을 할 때의 임금 평등은 125위에 그쳤고, 추정근로소득 수준도 120위(남성 4만 6천183달러 · 여성 2만 760달러), 건강분야에서 건강기대수명 평등에서 세계 1위이지만 출생 시 남녀성비불균형은 125위, 각료 중 남녀비율 128위, 교육분야에서 식자율 평등항목은 66위 인 반면 고졸졸업 후 3차 교육평등도는 112위

*성별 · 성적지향 · 지역 · 계층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시민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성평등 관점의 민주주의가 이뤄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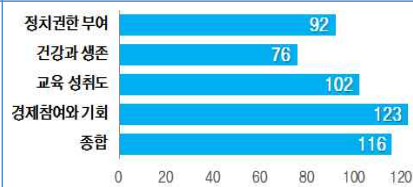


**GGI(Gender Gap Index)는 세계경제포럼이 내년 각국의 경제 · 정치 · 교육 · 건강 분야에 대한 성별 격차를 수치화하여 국가별 순위를 매김. 지수가 '1'이면 완전평등, '0'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

〈그림〉 2016 세계성평등지수 (1-10위)

국가	순위	성 평등 지수	국가	순위	성 평등 지수
아이슬란드	1	0.874	아일랜드	6	0.797
핀란드	2	0.845	필리핀	7	0.786
노르웨이	3	0.842	슬로베니아	8	0.786
스웨덴	4	0.815	뉴질랜드	9	0.781
르완다	5	0.800	니카라과	10	0.780

〈그림〉 2016 한국 성평등지수



자료 :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6

02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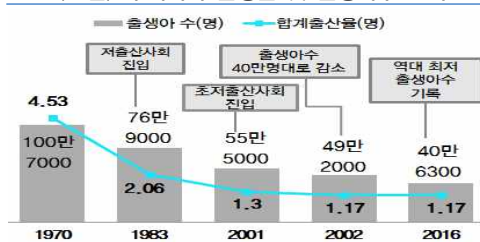
- 성평등이 우리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제고 및 정책 추진 필요
- 가장 불평등한 부분 중 하나인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여성의 '독박육아' 극복을 위한 남녀 일 · 가정 양립 실천 등을 위해 남성과 여성, 그리고 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제를 마련하여 저출산 및 성불평 문제 해소

2. 2016년 출생아 수, 역대 최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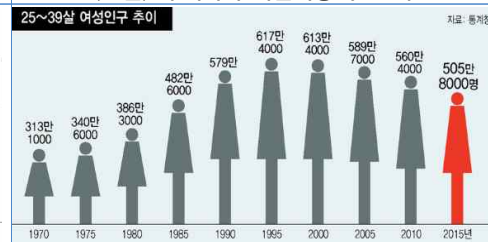
-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100명이 급감하였고,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추락
 - 특히, 출생아 수는 정부가 1970년 출생아 수 통계치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6.25 한국 전쟁당시와 유사한 수준
- 우리사회가 가임기 여성의 감소, 청년층의 자녀수 감소, 미래 기대소득 감소 등 '저출산의 덫'에 갇히면서 출산율보다 '출생아 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
 - 지난 10년간 한국의 가임여성(임신 가능 연령대 여성)수가 82만 명이나 줄어들었는데, 출생아 수가 같더라도 가임기여성수가 줄면 출산율은 더 높게 나타나므로 출산율보다 출생아 수를 높이는데 정부 정책의 목표를 전환할 필요

*통계청, 2016년 출생통계

〈그림〉 우리나라 출생 및 출생아수 변화



〈그림〉 우리나라 가임여성 수 변화



자료 : 통계청

자료 : 한겨레(2016.12.20.) "출산율 반등 쉽지 않아"

- 정부는 출산장려대책 강력 추진을 위해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하고 경제계·지역사회와 결혼·출산 양육친화적 문화를 바꾸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발표
 - 현재의 초저출산 상황은 이미 30년 전에 예약된 미래였다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시계(視界)와 인내심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접근해야만 저출산 문제 해결 가능
 - 현재 34살인 1983년생이 태어나던 해에 이미 출산율이 인구대체가능수준인 2.1명으로 떨어져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지만, 정부는 '자녀명 낳기 가족계획'을 계속적으로 추진**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제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사회전반의 구조와 문화가 결혼, 출산 양육친화적으로 바뀌도록 총력대응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운영

**우리나라 가족제 획사업은 1960년대 3명 출산 권장/ 1970년대 2명 출산 권장/ 1980년대 1명 출산 권장

분야	내용
청년층 고용인정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근속시 1200만원 자산형성 지원대상 3만2000명으로 확대, 청년인턴채용도 5만명 확대, 청년창업지원금 연간 최대 1억원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신설하여 500팀 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신혼부부 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0.7%로 확대, 신혼부부 공공건설임대주택 1만가구 추가 지원, 매입임대주택 2000가구 추가
맞춤형 보육지원	국공립어린이집 180개소, 공공형 150개소, 직장 80개소 신규확충,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금 최대 8억원 인상, 초등돌봄교실 4000명 추가지원, 아이돌보미 2만000명까지 확대
일·가정 양립 일상화	3월부터 공공부문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시행, 유연근무도입 중소기업 근로자당 간접노무비 월40만원 지원, 출산휴가급여 지원 상한액 150만원 인상, 중소기업 비정규직·남성 육아휴직지원금 월30만원으로 인상, 중소기업 1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사업주 지원금 2배 이상,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 200만원으로 확대 등

02 시사점

- 경기도는 젊은 세대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결혼 유도과 출산장려정책을 잘 전개한다면 출산율 및 출생아 수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 적극 추진
 - 청년 고용·주거·보육 환경 개선 등의 적극적 추진과 함께, 31개 시군 간 출산율 차이가 큰 만큼 인구예보·인구영향지표와 같은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 관리하는 것이 필요
 - 출산율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 요소이므로 이를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사회성과보상방식 등)을 마련

3. 재난적 의료비 가구 지원, 의료보장성 강화에 기여

01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과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업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가구를 지원, 의료비 경감과 보장성 강화에 높은 정책적 효과 창출
 - 2013년 8월부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을 통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대 중증 질환과 중증화상의 제한적 질환에 대해 한시적 지원을 수행
 -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제1, 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 개선
 - 제도 시행을 통해 사업 지원 대상자의 보장률은 73.2%→82.2%로 9%p 증가했으며, 의료비 부담률은 101.2%→53.5%로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여 정책의 효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 2월 22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재난적 의료비 가구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및 지원사업의 확대 방안을 발표
 - 재난적 의료비 가구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WHO의 '소득대비 의료비 지출이 40%를 초과 가구'를 활용하나, 소득분위 1~3분위는 소득의 20%이상, 4~8분위는 소득의 30% 이상, 9~10분위는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였을 경우 재난적 의료비 가구로 정의**
 - 재난적 의료비 가구에 대한 재정의를 통해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16.3만 명으로 증가하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총 2,319억 원으로 추정

〈전국민 재난적 의료비 제도지원기준에 따른 대상자 수 및 소요재정〉***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A] 현행(2014년)	[B] 제도확대	[A - B] 증감규모	
계	대상자수	16,231	162,832	+146,601	
	소요재정	51,773	283,678	+231,905	
의료급여	대상자수	5,281	70,552	+65,271	
	소요재정	13,149	89,672	+76,523	
차상위**	대상자수	1,151	20,824	+19,673	
	소요재정	3,533	25,917	+22,384	
건보 소계	대상자수	9,799	71,456	+61,657	
	소요재정	35,091	168,088	+132,997	
소득 10분위	1	대상자수	1,518	33,895	+32,377
		소요재정	5,039	56,867	+51,828
	2	대상자수	1,165	15,111	+13,946
		소요재정	3,796	31,994	+28,198
	3	대상자수	1,122	10,986	+9,864
		소요재정	3,540	26,034	+22,494
	4	대상자수	1,201	3,784	+2,583
		소요재정	4,052	13,323	+9,271
	5	대상자수	1,237	2,880	+1,643
		소요재정	4,339	11,698	+7,359
	6	대상자수	1,185	2,096	+911
		소요재정	4,439	10,352	+5,913
	7	대상자수	1,010	1,424	+414
		소요재정	4,092	8,152	+4,059
	8	대상자수	747	1,010	+263
		소요재정	3,137	6,647	+3,510
	9	대상자수	435	222	-213
		소요재정	1,900	2,365	+464
	10	대상자수	179	48	-131
		소요재정	755	657	-99

*저소득층 기준
2016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위소득 80%이하
(소득기준 1), 중위
소득 120%이하(소득
기준2)로 규정

**자료: 건강보험
정책연구원(2017),
건강보장정책토론회
자료집

***한시본인부담
의료비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기준
초과시, 법정본인
부담금에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한
후, 나머지 현재본
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방안(단,
단일주상병 연속입
원일수 90일까지
혹은 2천만원 상한
까지 지원)

02 시사점

- 현 지원정책은 한시적·제한적이므로 안정성·포괄성·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확대 필요
 - 현재 사업은 복권기금과 민간기부금(공동모금회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사업 지속을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미지급금 4%(1.76조원)****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4대 중증 질환 외 난치성·만치성 질환까지 보장 확대

****건강보험법에
재정 안정화를 위
해 국고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금을 20%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6% 지원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전국 9개 道 고용률 및 실업률 비교

지난 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결과」를 토대로 전국 9개 道의 고용조사 결과를 비교

- 지난해 하반기 전국 9개 도의 총 취업자 수는 1,441만 명, 고용률은 63.6%로 집계*
 - 9개 道 내에 市 지역은 78곳 · 郡 지역은 77곳(총 155곳)이 있으며, 2016년 하반기 市 지역 고용률은 59.2%, 郡 지역 고용률은 66.6%로 집계
- 9개 도 가운데 제주도의 고용률이 69.7%로 가장 높고, 경기도는 58.7%로 가장 고용률이 낮음
 - 실업률에서도 경기도의 실업률이 3.1%로 전국 道 중 가장 높음

〈표 1〉 전국 9개 도 주요고용지표 현황 (2016년 하반기)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15~64세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15~64세 고용률	실업률
경 기	60.6	58.7	64.3	3.1					
강 원	64.3	63.4	69.2	1.5	전 남	66.5	65.6	71.7	1.3
충 북	65.6	64.5	71.0	1.7	경 북	66.8	65.7	71.9	1.6
충 남	65.9	65.0	69.4	1.5	경 남	66.1	64.9	70.4	1.8
전 북	64.7	63.8	69.5	1.3	제 주	71.1	69.7	73.9	2.0

*전국 7개 특별 · 광역시를 제외한 9개 광역도만을 대상으로 정리

(단위: %)

- 군 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률이 낮은 고령 및 여성인구가 농림어업분야 취업자로 집계되어, 시 지역보다 높은 고용률을 보임
 - 도내 31개 시군별로도 시 지역보다 군 지역일수록 고용률은 높고 실업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
- 지난해 하반기 경기도 내 취업자는 625만 3천 명, 실업자는 21만 8천 명이며, 고용률은 시 지역(28곳) 58.7%, 군 지역(3곳) 60.3%로 나타남
 - 시군별 고용률은 동두천(51.5%)과 과천(52.6%)이 전체 155개 시군 중 각각 155번째, 153번째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이천(65.4%)이 56번째로 도내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음

〈표 2〉 도내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현황 (2016년 하반기)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15~64세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15~64세 고용률	실업률
경 기	60.6	58.7	64.3	3.1	안 양	61.8	59.1	64.4	4.4
시지역	60.6	58.7	64.2	3.3	양 주	60.8	58.6	65.5	3.7
고 양	59.1	57.1	62.9	3.4	여 주	61.5	60.5	68.7	1.6
과 천	54.7	52.6	58.3	3.9	오 산	62.8	61.5	65.3	2.1
광 명	60.0	57.4	63.2	4.3	용 인	57.9	56.1	61.8	3.2
광 주	62.0	60.2	66.2	3.0	의 왕	58.8	56.6	61.8	3.9
구 리	60.5	58.1	63.2	4.0	의정부	57.3	54.9	61.6	4.2
군 포	61.7	58.9	64.1	4.5	이 천	66.9	65.4	70.0	2.3
김 포	61.9	59.7	64.7	3.6	파 주	62.1	60.4	66.5	2.9
남양주	59.1	56.8	62.6	4.0	평 택	60.6	59.5	64.5	1.8
동두천	54.0	51.5	59.6	4.6	포 천	60.7	59.8	66.4	1.4
부 천	61.3	58.4	63.4	4.8	하 남	60.0	58.4	64.1	2.8
성 남	61.9	59.7	64.9	3.5	화 성	62.8	62.0	65.7	1.2
수 원	60.2	58.0	62.5	3.6	군지역	60.9	60.3	67.5	1.1
시 흥	62.1	60.1	64.2	3.2	가 평	62.9	62.3	68.9	0.9
안 산	61.5	59.2	63.2	3.8	양 평	59.3	58.1	65.7	2.1
안 성	63.2	62.2	66.9	1.7	연 천	60.6	60.4	68.0	0.3

(단위: %)

2. 재단 주요사업 안내

사업명	주요내용
2017 찾아가는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 수 : 3. 2.(목) ~ 3. 10.(금) • 대 상 :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법인) 및 협회 등 • 내 용 : 서번트리더십 과정(15시간), 행복심리 아카데미(12시간) • 문 의 : 경기복지재단 역량강화팀 (☎267-9352)

03

FACT CHECK

고용률 높은 지역, 고용의 질도 높을까?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9개 도내 군 지역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군 지역 고용률은 66.6%로, 시 지역(59.2%)보다 7.4%p, 전국 고용률(61.1%)보다 5.5%p 높음
- 통상적으로 '고용률이 높다'는 것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이 높음'을 의미
 - 이에 통계청 발표 이후 다수 언론에서 지역별 고용률을 단순 비교하여 '최고'와 '꼴찌' 등 전국 155개 시군을 하나의 기준으로 '줄 세우기'하는 경향이 관찰**
- 그러나, 단순히 취업자 수만을 고려한 고용률 지표는 '실제 고용의 질(質)'이 어떠한 지, 또한 고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수준이 어떠한 지를 반영하기에 불충분하다는 비판
 - 이번 조사결과에서처럼 시 지역보다 군 지역 고용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지역주민 다수가 농림어업직 취업자로 집계되기 때문으로, 고용률 지표가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비율, 임금수준 및 격차 등 고용의 질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
- 경기복지재단(2016)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시 지역보다 고용률이 높은 군 지역의 일하는 노인*** 중 35.2%는 농림어업직에 종사, 임시일용직에는 68.8%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
 - 농림어업직과 임시일용직 종사하는 노인 비율이 80%가 넘는 군 지역의 월 경상소득은 약 11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결국 고용여부 자체가 삶의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
- 고용률은 취업자 비중의 증감여부를 명확히 드러내주는 지표이나, 실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임금수준·근로 안정성·적정 근로시간 등 고용의 질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고용지표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

*통계청, 2016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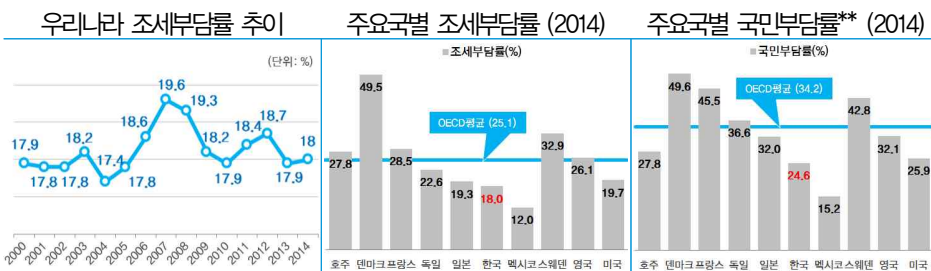
**KBS(2017.2.21.) "서귀포시, 4년째 고용률 1위...동두천 최하위" 등

***일하는 노인 :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집계

04

통계로 보는 복지

주요국별 조세부담률* 비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왼쪽), OECD(가운데·오른쪽)

-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조세부담률 현황을 비교
 -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00년 이후 평균 18.2% 수준임. 지난 '07년에 19.6%으로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영향으로 '10년 다시 17.9%까지 감소
-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 29개국 중 28번째로 낮음
 -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곳은 덴마크(49.5%), 가장 낮은 곳은 멕시코(12.0%)이며, 우리나라는 18%로 OECD평균(25.1%)보다 7.1%p 낮음
 -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에서도 덴마크(49.6%)가 가장 높고 멕시코(15.2%)가 가장 낮으며, 우리나라는 24.6%로 OECD평균(34.2%)보다 9.6%p 낮음

*조세부담률: GDP에서 조세수입(국세+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율

**국민부담률: GDP에서 조세수입(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 사회보장기여금에는 공적연금과 공적보험이 모두 포함